

‘비대면진료 약배송’ 갈등… “허용해야” vs “오남용 우려”

“약 배송 금지로 불편 가중·불법 배송 우려” “약 배송 허용 시 탈모약 등 의료쇼핑 우려”

“비대면 진료 확대에도 약국을 직접 방문해 처방 약을 수령하도록 하면 환자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약국에 ‘퀵 서비스’를 보낼때니 약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등 불법 배송이 늘면 어떻게 할 것인가.”(소비자·비대면 진료 플랫폼)

“여드름약, 탈모약, 다이어트 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방 여부를 알 수 없는 ‘비급여 전문의약품’으로 중복 처방 등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 약 배송까지 허용하면 의료쇼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지난 15일부터 야간·휴일에도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약 배송’ 허용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약 배송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약국을 방문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심·벽지 환자나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 제외)이다.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어서다. 약사가 이를 위반해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

품을 판매하고 약제비 등을 청구하면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비대면 진료를 원하는 환자들과 의료 취약자 주민들은 약국을 방문해 처방약을 받아야 해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코로나19, 독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아데노바이러스 등 호흡기질환이 동시에 유행하고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비대면 진료 수요가 늘어났는데, 정작 약은 나가서 받아야 한다는 이유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 관계자는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보니 ‘처방전을 받아도 근처 약국이 안 된다고 해 약을 받을 수 없었다’는 등 불만이 많았다”면서 “비대면 진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진료를 받아도 야간이나 주말 비대면 처방전을 팩스로 접수하는 약국을 찾지

어려워 약을 찾아 헤매는 ‘약국 뺑뺑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약 배송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장기적으로 ‘불법 배송’이 고개를 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의 A 약사는 “최근 ‘고열인 아이와 돌이 있어 외출하기 어렵다며 퀵 서비스를 보내면 약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환자가 있어 난감했다”고 말했다. 약국에서 퀵 서비스나 택배로 약을 배송할 경우 약사법 위반에 해당될 뿐 아니라 배송에 가담한 퀵 서비스 기사도 의료법(시행령 제10조의2)을 위반하게 된다.

반면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확대에 의료쇼핑에 따른 오남용과 오진 등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사후 피임약, 마약류 처방을 제한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오남용이 우려되는

여드름약, 탈모약, 다이어트약은 어디서나 전화 한 통이면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 약은 중복 처방 등을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도 지난 14일 “비대면 진료 확대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지만 정부가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확대하려 한다”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 사고와 약물 오남용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를 우려한다”면서 “재진 중심, 초진 예외적 허용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희망 나눔 사랑의 온도, 지금은 60.5도 성탄절인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사랑의 온도 60.5도를 나타내고 있다. 사랑의 온도탑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공동모금 캠페인으로, 목표액은 4349억원, 모금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내년부터 형제·자매도 ‘실종아동찾기’ 유전자 등록 가능

경찰, 유전정보 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 완료 지적장애인·치매환자도 ‘유전자 분석제도’ 운영

내년부터 형제·자매도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유전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전정보 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완료해 내년부터 실종 아동의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유전자 등록이 가능해졌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2004년부터 실종아동과 지적·자폐

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찾기 위한 ‘유전자 분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총 4만1055건의 유전자를 채취해 857명의 장기실종자를 발견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1981년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실종돼 독일로 입양된 아동(당시 4세)을 유전자 분석해 지난 3월 여주경찰서에서 42년

만에 모친과 아들이 상봉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기존 유전정보 검색시스템은 1촌 관계인 부모-자녀만 유전자 등록 및 검색이 가능하고,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검색 정확도 및 보안성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전정보 분석 특성상 초기에는 일치 건이 많지 않을 수 있으며 많은 데이터가 누락되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수권기자

‘70대 입욕객 3명 감전사’ 세종 목욕탕 사고, 오늘 합동감식

“온수탕 안에 있는 기포 발생기, 욕탕 내부 등 조사 예정”

입욕객 3명이 전기 감전으로 사망한 세종시 조치원읍 목욕탕 사고 관련 경찰이 26일 오전 2차 합동감식을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소방당국, 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사고가 난 조치원읍 목욕탕에 대한 현장 감식을 한다.

앞서 24일 1차에 이어 2번째 실시되는 합동감식은 온수탕 안으로 전기가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누전 원인을 밝히기 위해 배전함 등 전기공급시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1차 합동 감식 후 경찰 관계자는 “전선이 끊어진 흔적 등은 발견되지는 않았다”라며 2차 감식은 “지하 1층 목욕탕 내 구조를 살펴보고, 온수탕 안에 있는 기포 발생기 등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날 오전 부검을 할 예정이다.

사고가 난 목욕탕은 1984년에 지어진 39년 된 3층 건물로 지하 1층은 여탕, 지상 1층은 카운터와 남탕, 2~3층은 모텔로 사용됐다.

세종시 목욕탕 전기 감전 사고 6개월 전인 6

월 22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 부터 ‘안전감식’을 받았지만 ‘이상없음’ 결과가 나왔다.

또한 사고 난 곳은 목욕탕과 숙박시설이 같이 있는 곳으로 ‘다중이용시설’로 등록이 안 됐다.

사고는 24일 오전 5시 37분께 일어났으며 소방본부에 따르면 목욕탕 여탕에서 ‘오약’ 소리를 들은 탈의실에 있던 목욕객이 신고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3명 모두 총복대병원, 청주하나병원, 세종충남대병원으로 각각 이송됐지만 이날 모두 사망했다.

이슬비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